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4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강경숙 · 김재원
윤종오 · 서왕진 · 백선희
신장식 · 정춘생 · 이해민
차규근 · 김선민 · 박은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.

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.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간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

안정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5조의3 신설,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).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임차인의 재신청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경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 내에 다시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재신청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차인의 재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 <p>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 <u>2년</u>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 을 가진다.</p>	<p><u>제15조의3(임차인의 재신청) ①</u></p> <p><u>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전 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결과 전 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 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경 등 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 내에 다시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재신청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----- <u>-3년-</u>----- -----.</p>